

민주 재심위, 장수군수 재경선 결정

후보자들 공방 ‘치열’

양성빈 “최훈식 고발에 선관위 최종 혐의없음”

최훈식 “양성빈 경선 불복에 대해 반박”

지난 2일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장수군수 재경선을 결정한 가운데, 양성빈 예비후보와 최훈식 후보가 3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이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최훈식 예비후보의 주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훈식 예비후보도 같은날 양성빈 후보의 휴대폰 대리투표를 통한 경선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훈식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양 예비후보 캠프에서 보내 MBC 녹취록 공개 요청에 동참하는 요지의 제인을 담은 공문에 대해 황춘식 시무장이 거절의 의사표명했다.

하지만, 최훈식 예비후보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평과 제안서의 형식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숨긴 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상기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아예 따라, 양 예비후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공표를 통한 신문·방송 부정 이용의 정황이 발견돼 결과적으로 양 예비후보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수없이 불법과 비리 선거의 정황이 포착되며 왜곡시킨 경선이 당원의 노력과 군민의 열정을 온전히 수용되지 못함을 인인간에게 생각해 고심 끝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어르신에 대한 속임수와 우롱이 도를 넘었고, 더 이상은



선거운동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사진 왼쪽)와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훈식 예비후보.

장수군이 부정선거의 결과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정·부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리의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군민의 선택을 받기 두려운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해 직접 서명한 공정선거 서약을 이행하고, 장수군의 선거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수군을 위한 양성빈과 장수군 민의 열정에 깨어있는 장수군민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훈식 예비후보는 “양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가 휴대전화를 수거해 경선을 대리하는 대가로 5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했다.

최훈식 후보 측은 “지역 기자와 함께, 제보자 가족 등 의혹이 제기된 4명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의혹의 중심 인물은 번암면의 전 미를 이장인 임 모씨(여)이다.

임씨는 “경선 전날 친정엄마가 반찬 가져가고 전화를 했다”며 “반찬을 가져온 친정동네 마을회관에 가서 엄마랑 둘러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고, 내일 경선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이어, 임씨는 “친정엄마가 나는 스마트폰을 잘 못받으니까 네가 대신 가져가서 해달라고 말씀했다”면서, 그때 같은 자리에 있던 A 할머니가 “내 전화기가 고장 난 것 같으니 장수읍에 가서 고쳐다 달라”며 주민등록증이 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건네줬다고 말했다.

한편 5만원의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임씨는 “친정엄마와 A 할머니는 자매 이상으로 박역하게 지내왔다”며 “곧 A 할머니 남편의 제사가 있어 친정엄마가 제사에 올 조기리도 사라며 5만원을 A 할머니께 드린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후보측은 또, 장계면에서 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수거해 5만원 주고 대리투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고령인 2명의 노인이 자신들은 전화여론조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대신 전화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식 후보측은 “모든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02로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며 “전화기를 수거해 5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후식 후보나 캠프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 대통령 “검수완박 하위 법령 마련… 중수청 설치 논의”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인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날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수완박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침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 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안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업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비합리적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 담겼던 중수청(한국형 FBI) 설치안이 최종 입법 과정에서 빠져버린 것과 관련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의 후속 논의를 미루기로 했지만, 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중수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준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족 국무위원회들은

대선공약 ‘관광트램’, 임기 시작 전에 파기 수순?

민주 김윤덕 의원 “오히려 구제 강화” 지적

“관광트램·도시철도,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 수단”



운설텔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관광트램 도입’이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임기 시작도 전에 공약 추진이 무산되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시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운설텔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중 관광트램을 공약한바 있고, 4월 호남을 방문해 볼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으나, 관광트램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관광트램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여러 전문기관 단체들과 수 차례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진행, 관광트램에 맞는 안전규정 확보 시 추진에 문제

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해왔다”며 “시속 20km/h로 운행하는 관광트램과 100km/h 이상으로 달리는 도시철도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 수단을 한데 묶어 규제하려한다”며 “관광트램에 도시철도에 준하는 안전규제 도입 취지의 용역결과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 시작도 전에 공약을 취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꼬집었다. 김윤덕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관광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를 통해 차입파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귀찮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행정의 현실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운설텔 당선인이 강조한 ‘웨도언젠’ 및 유자판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에 따르면 차량구역부터 정거장 설계 기준까지 관련 법안, 설비기준, 안전기준 등을 도시철도법을 준하게 돼있어

/유호상 기자

새정부 지역 공약, 영남·충청권에 집중

민주 김수홍 의원,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남원 공공의대·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개설 등 반영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추경호)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을 윤설텔 정부의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차도 반영될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설텔 정부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영남·충청권에만 주요 사업들을 배치한 반면 전북권 공약은 기존 새민금,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등 기존 혁신 사업의 ‘제당’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급한 혁신사업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북의 숙원 사업인 남원공공의대나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과 같은 인프라 사업들을 지역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로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전북 광역의원 후보 5명 추가 발표… 선거구 선정 마무리

의산1~4·김제2 등 지난 1일 발표 제외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광역의원 익산시 전지역과 김제시2선거구의 경선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선거인단 결과 100%를 반영한 경선 결과, ▲익산1선거구 김대중, ▲익산2선

거구 김정수, ▲익산3선거구 윤영숙, ▲익산4선거구 한정수, ▲김제1선거구 황석희 후보가 각각 선정됐다.

앞서 전북도당은 지난 1일 단수공천 9곳(청년공천 포함)과 경선이 중단된 5곳을 제외한 22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후보는 48시간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전북도당은 각 선거구별

후보로 ▲전주1 이병도 ▲전주2 진형석 ▲전주3 송승용 ▲전주4 김이재 ▲전주5 최형열 ▲전주6 김희수 ▲전주7 이병철 ▲전주8 강동화 ▲전주9 서난이 ▲전주10 이명연 ▲전주11 김명지 ▲전주12 국주영은 ▲군산1 강태장 ▲군산2 김동구 ▲군산3 박정희 ▲군산4 문승우 ▲김제1 나인권 ▲김제2 임승식 ▲김제3 염영선 ▲남원1 이정린 ▲남원2 양해석 ▲완주1 윤수봉 ▲완주2 권요안 ▲진안1 정용태 ▲무주 윤정훈 ▲장수1 박용근 ▲임실 박정구 ▲순창1 손종호 ▲고창1 김성수 ▲고창2 김만기 ▲부안 김정기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표시된 9곳은 단수 공천 지역)

/유호상 기자

김철수 도의원, 민주 공천 재심 신청

“인터넷 허위기사 상대후보측 선거과정서 조직적 유포” 주장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도내 한 인터넷매체는 김철수 의원이 시·도의원을 거치며 재산을 수십억으로 늘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일은 뒷전이고, 돈 벌기에만 급급했다는 식의 비방기사와 판공서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공사를 주었다는 식의 허위事實을 작성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기사는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고, 명백히 허위事實을 근거로 한 기사”라고 말하며, 해당 기사를 고소한 상태다. 또한, 해당 기사는 김 의원에게 아무런 반론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광역의원 후보자로 면접 당일 인터넷에 게재됐고, 상대 후보 측은 이를 곧바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유포한 임모 씨를 조만간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상대 후보가 본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

김철수 의원은 “당내 경선에 기합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기사로 인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 노력이 허무이침에 부정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고 밀었다”면서 “정치생명을 떠나 이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상 기자